

# 발포책임자·민간인 집단학살 등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풀어야 할 7개 핵심과제

### 행방불명·성폭력 사건·북한군 광주 침투 조작 집단 조사 전두환·신군부 핵심세력 행정 추적 정부가 힘 실어줘야

출범 5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앞날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40년 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핵심 과제들을 3년 안에 풀기 어렵지 않는데다, 증인과 자료 확보 등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됐던 국방부와 미국 비공개 자료 등의 적극적인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개 핵심 과제 풀어야 진상 규명한다=조사위가 이날 9명이 참석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의결한 시급한 조사 대상 안건은 모두 7개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성폭력 사건 ▲북한

군 광주 침투조작 사건 ▲전남일대 무기괴 피습사건 등이다.

특히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은 5·18 민주화 운동의 핵심 과제에도, 물증을 찾느라 40년째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위는 이에따라 1980년 5월 19일 광주 조국 앞 최초 발포,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의 지휘체계 및 발포 책임자, 발포 경위를 규명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조사위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찾고 전두환씨 광주 방문설 등을 조사하면서 신군부 핵심 세력의 행정 및 발포 명령 개인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지휘체계의 역순으로 작동한 '자위권 발동' 경위, 각종 발포사건 조사, 진압작전을 재구성해

### ■진상조사위의 '민간인 집단학살' 조사일정

순번	일시	집단 학살 사건	시한
1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사건	2021. 5
2	1980년 5월 20~21일	전남대·광주교도소 일대 집단학살 사건	2020. 12
3	1980년 5월 22일	화정동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2020. 12
4	1980년 5월 22~23일	주남마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2021. 5
5	1980년 5월 23일	해남우슬재·북평리 31사단 민간인 학살사건	2021. 5
6	1980년 5월 24일	송암동 일대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2020. 10

발포 실행자를 특정하고 무기괴 피습 및 무기 피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165명.

조사위는 이들에 대한 사망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사망자별 사망 일자·장소·경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망에 이른 사건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규명할 계획이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사망사건과 23일 학동 습합차 탑승차 총격 사망사건,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전북대생 이세종 사망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2와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집단 학살을 자행한 당사자를 비롯, 현장 지휘책임자들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조사위가 짚은 집단학살 사건은 ▲광주역 집단발포(1980년 5월 20일) ▲전남대 이하 구 건물과 광주교도소 일대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 및 가혹행위(1980년 5월 20~21일) ▲화정동 일대 민간인 집단학살(1980년 5월 22일) ▲주남마을 집단학살(1980년 5월 22~23일) ▲해남 우슬재와 북평리에서 이뤄진

31사단의 민간인 학살·암매장(1980년 5월 23일) ▲송암동 일대 민간인 집단학살(1980년 5월 24일) 등이다.

중요한 과제에도 국방부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공식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5·18 행방 불명자 규모와 소재 규명도 조사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사위는 지난해 김용장씨 등이 증언했던 '광주 국군통합병원 소각장 시신 소각' 설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화장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끊임없이 왜곡·확산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조사도 3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조사위는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 600여명의 광주 침투 주장 ▲북한 특수군 출신으로 직접 침투했다는 탈북자들 주장 ▲우리 군이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에 협조했다는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사위를 이를 위해 당시 광주 일대 계엄군·보안부대·경찰 등에 대한 조사와 교

도소·무기고 습격, 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군용차량 탈취 등에 가담했던 시민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자들의 치유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조사위의 조사가 성과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조사위의 조사 과제들이 40년 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던 5·18 핵심 과제들인데다,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관련 자료의 부재와 증인 등을 확보하는데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미국 비공개 자료 등을 확보하기가 여전히 수월하지 않은 점도 진상 규명을 위해 담보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5·18 연구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그동안 미진했던 여러 차례의 조사와 달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자동 사무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 코로나19 여파 5·18 민주묘지 참배객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발길도 확연히 줄었다.

11일 국립 5·18민주묘지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국립묘지를 찾은 방문객은 3만 83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8만 4684명)의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8일 까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객도 7070명(학생1453명, 일반인 5605명, 외국인 12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40년을 맞는 올해 1월만 해도 2만 2438명의 참배객이 찾아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듯했다. 지난해 1월 참배객은 1만 4874명으로 올 1월보다 7664명이나 적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후 참배객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올 2월 7758명에서 3570명(3월)까지 급감했다가 4월에는 4557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2월 1만 977명, 3월 1만 6889명, 4월 3만 3144명)에 못 미치는 형

편이다.

5월이 되면서 묘지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가보훈처 설명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의 단체 참배객이 줄어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등교 개학을 못하면서 학생 참배객 수도 줄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집계한 지난해 5월 한달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객은 34만 9972명(학생 14만 2058명, 일반인 20만 6149명, 외국인1765명)에 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경영난 알리지 않고 물품공급 계약했다 미이행...사기일까?

### 법원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항소심도 원심으로 무죄 선고

거래 상대방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알리지 않고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영 상황 악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사기일까.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28개 종류의 부품을 공급할테니 1억700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4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회사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부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속임)해 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회사 직원을 월급 5000만원, 거래업체 연체대금 3000만원, 체납세금과 은행 이자 등이 밀려 있어 대금을 받더라도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부품 28종류를 공급하겠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약 체결 당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어도 단순한 민

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1998년)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가 물품공급능력을 과장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부품은 정상적으로 공급된 점, 계약 체결 당시 A씨 회사의 영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사소한 시비가 살인으로...분노 범죄 잇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소한 시비로 터진 분노 범죄가 잇따르면서 개인 분노와 정신건강을 다스리게 도와줄 지역사회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남부경찰은 1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공원에서 후배 B(56)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건설현장 일용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몇일 전 말다툼을 벌인 B씨와 화해를 위해 만나 술을 마시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날 밤 9시 40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광주서부경찰도 지난 9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거리에서 친구 D(42)씨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상해치사)로 C(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했다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같은 날 새벽 6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평생 어부바 신협